

제2007-4호(요약)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 요약 본 -

2007. 12.

집필진

□ 책임자 : 김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 참여자*

강병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김병완 (광주대학교 법정행정학부 교수)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태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석연구위원)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 교수)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규호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한기주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가나다 순

목 차

I. 지금까지의 국가비전 기조 및 현황	1
II.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의 필요성	3
III.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III-1. 지속가능한 비전의 구성원칙	6
III-2. 국가비전의 지향점	8
IV. 국가비전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11
미래전략 1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12
미래전략 2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무역체계의 변화를 도전의 계기로』	15
미래전략 3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형성을 내적역량강화의 근원으로』	18
미래전략 4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전략으로』	22
미래전략 5 『사회통합과 사전예방적 갈등관리를 지속성장의 기본 틀로』	27
V. 결론	
V-1. 새로운 국가비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31
V-2. 향후 추진 및 보완·발전 시켜야할 부문	32

지금까지의 국가비전 기조 및 현황

□ 전 지구적 차원의 현안 - 지속가능한 발전

- 산업화 이후 개발위주의 경제·사회·환경관 모두에 있어 “**알맞은 규모로의 지향**”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요소의 중요성을 상실
 - 국지적, 지역적 오염의 문제가 감지된 이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자원, 식량의 위기가 고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환경적 위기 >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성과의 이면 - 사회·환경정책의 지체

- 1960년대 이후 국가가 7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내·외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집중
 - 1인당 GNI는 '60년대 79 달러(US)에서 '05년 16,291 달러로, 실질성장율도 '60년대 1.2%에서 9.2%('95)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최근 4.0%('05)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조만간 실질적 선진국으로서 '후발추격'을 넘어서 국제사회, 세계시장의 '선도경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 돌입할 예정
- 현재 선진국으로서 선도경쟁을 해야 될 전환점에 놓여져 있지만, 그 동안의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여러 후유증이 대두**
 - 삶의 질,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재해와 건강위협 심화,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 심화, 환경부하의 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문제 발생

□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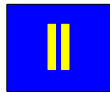
- 참여정부는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의 사회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경제성장의 토대로 보고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을 추구**
- '06년 8월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 중이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의 3대 상생전략을 마련
 - 경제성장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되는 시각으로부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정책의 역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비전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 5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도혁신·선제적 투자와 비전 실행계획을 통해 추진 중

□ 성장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해 노력 중

-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념을 발전시켜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정책이념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
 - '05년 6월 **국가지속가능비전**(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선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거시적인 틀과 내용을 명확화**
 - 4대 정책목표 및 9대 핵심정책을 토대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 미래 세대와 현세대의 공동번영,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지향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정부 행정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틀 구축**
 - '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및 공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의지 구현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부문 미래전략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

- 국가지속가능비전에서 언급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가정책 추진전략 구상의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
 - 비전 2030에서 언급한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 개념과 맥을 함께하는 지속발전의 구체적인 정의를 토대로 미래구상을 준비
- **환경부문 미래전략을 국가정책어젠더로 삼고 실질적인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체제를 구현하는 노력 중요한 상황**
 - **환경과 환경정책이 경제적 부담이자 규제 강화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인 동시에 국가경제의 수종산업이라는 원리를 정립, 실천**
-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입각하여 기후변화 등 세계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선도 선진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세계에 대한 국가공헌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의 필요성

□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고려가 미흡한 국가비전

- 참여정부에서 비전 2030 등 국가의 장기비전이 만들어졌으나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거나 배제되어 체계적인 대응 등에 한계가 대두**
 - 국가경쟁력과 함께 경제 및 사회 등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는 미흡하고 제한적 ⇒ 국가경쟁력 강화부문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중요한 전략축 미흡
- 경제·사회에 초점을 둔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성과와 장점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을 추가·보완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국정 어젠다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비전을 추진할 필요**
 -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경쟁력 제고 전략
 -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한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

□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

○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 대두

- 지식기반경제의 주도세력인 창조계급은 인간적 가치, 개방성과 함께 환경을 중시 (리차드 플로이더, '02)
 - 미래 국가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의 하나로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선점,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본격적으로 등장(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04 ; 제임스 캔튼, '06)
 - 환경을 기업경쟁력과 경제정책으로 인식하는 추세 확산('환경은 돈, 경영이 바뀐다', 동아일보, '07.6.18 ;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환경이 경쟁력이다', '07.6.15 ; CO2가 돈이다, 머니투데이, '07.6.19)
- 경제 및 사회 동반성장의 기저를 이루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삶의 높은 질 확보를 통해 가능**
-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국토의 이용과 보전정책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식 기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경쟁력을 지닌 인적 자원의 관리, 육성 및 확보가 불가능

○ 경제성장 위주 시대의 경제·환경 통합에 대한 수동적 접근을 **자원-환경위기 시대의 능동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중요**

- 과거에는 환경오염 및 훼손의 원인이 경제활동임에 주목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 예방을 위한 교통, 에너지,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등 경제-환경 통합에 소극적인 정책을 채택
- 현재의 자원-환경위기 시대에는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의 경쟁력**임을 인식,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의 재구성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방식을 전환이 긴급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환경정책의 강화가 불가피**

○ 지금 경제·사회·환경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가정책은 구상단계에 불과

- 한 세대 앞(2030년)을 내다보면서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성장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 등 성장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하는 **국가비전을 마련하고 실천할 시점**

○ 국가 정책어젠더로 **환경부문을 끌어올려 실질적인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

-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 환경규제 강화 등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 경제성장 등의 위 기요소인 동시에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을 적극 활용
- 환경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를 견인할 부문**이라는 상황 인식과 이를 내재화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경쟁력에 과제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The Stern Review, '07.2)

※ 환경은 새로운 경제 규칙이 되고 있고, 환경기술을 선점한 기업들은 국제 사회에 환경 규제 의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이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그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기 때문

□ **지금부터 5~10년 내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 **현재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경우 비용측면에서 오히려 경제적**

-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경우 소요비용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방치할 경우 전 세계 GDP의 5~20%가 필요(Stem Review, '06)
- 2100년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약 58조원(최소 2조~최대 328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교토의정서를 준수할 경우 약 20조원으로 감소될 전망(KEI, '06)

○ 지구 환경변화로 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환경산업의 선점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체질 개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기조의 전환과 기반확충이 필요

-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너지효율개선과 고효율 제품생산, 에너지절약산업(ESCO), 청정연료개발(CDM) 중개비즈니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탄소관련컨설팅 등 새로운 기회가 도래
- 환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7천억 달러('05)에서 7,687억 달러~1조 달러('10)로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

※ '10년의 환경산업은 같은 시기 반도체 시장규모의 최소 3배 이상에 해당

※ 교토의정서 관련 '주목해야 할 5대 사업·제품'으로 녹색전력 인증사업, 식물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CO₂ free 제품 등을 제안(삼성지구환경연구소, '06)

<대한민국과 세계 환경산업의 성장>

구분	'00	'04	'10
대한민국(a) ¹⁾	11.5조	21.4조 (GDP의 2.75%)	35조 이상
세계(b)	4,952억달러('99) ⁵⁾	7,000억달러('05) ³⁾	7,687억달러 ⁴⁾ ~1조달러 ²⁾ 1조달러('15) ³⁾
비교(a/b*100)	2.3	3.1	3.5~4.6('10)

부문별 환경시장 규모 전망치 (단위: 달러)

구분	2000년	2010년
물·폐수처리 (수질개선 등)	202	279
대기오염	263	209
대규모건물	35	47
산업에너지	22	70
기타 (환경컨설팅 등)	71	117

합계: 2000년 5417억 달러, 2010년 7687억 달러
2010년 환경시장의 부문별 합계는 같은 시기 반도체 시장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

자료: EBC(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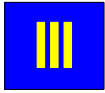
주) 1) OECD 환경산업 통계매뉴얼(1999)에서 ① 오염관리그룹, ② 자원관리그룹, ③ 청정기술·제품에서 ③을 제외한 산업규모를 산출(환경부, 2006), 2) 로열 더 치셀(동아일보, '07.6.18), 3) 산자부, 2006,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4) EBI 추계 결과(동아일보, '07.6.18), 5) 김태용[2000, 21세기 환경산업의 시장전망 및 동향,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은 '10년 환경산업이 8,8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경쟁국가인 일본은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에너지·환경시장의 선점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일본은 에너지절약·환경보전 관련기술과 법·제도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사업기회 창출을 도모(니혼자이신문)

※ '07년 4월 중국과 ① 중·일 에너지·환경 비즈니스모델 프로젝트 실시, ② 에너지절약 정책연수(300명), ③ 에너지절약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며, 일본 환경성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HERB 구상을 제시('04)

※ 베트남의 에너지절약법('09) 제정에 대비 ① 전문가 파견, ② 에너지관리사 등 환경관련자격증을 보급하며, 필리핀에도 에너지관리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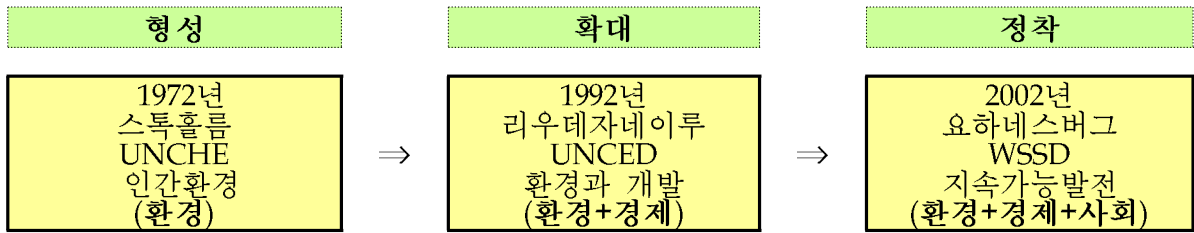


미래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III-1. 지속가능한 비전의 구성원칙

□ 국가발전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초

○ 지금은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



○ 국가발전패러다임: 근대화론(과거) ⇒ 복지국가론(현재) ⇒ 지속가능발전론(미래)

-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전략의 하나로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할 21세기의 과제

-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부문의 상호 연관성 이해와 통합 중심주의

· 경제성장은 사회적인 통합의 문제와 환경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통합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3개 요소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부문의 삼위일체적 정책 추진 및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할 때 가능

· 국가 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 3대 부문의 중요성에 등가의 원칙 적용

⇒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마련과 실천이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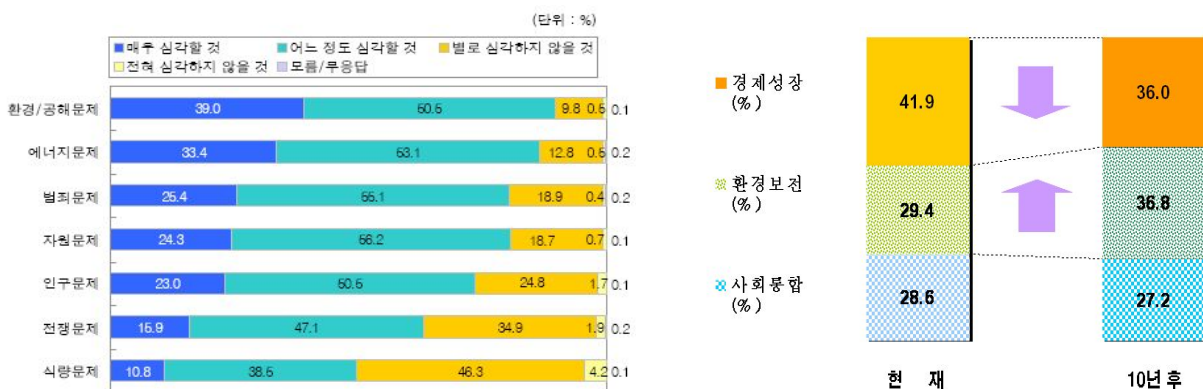


○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선진화

- 우리나라가 5년 후 직면할 여러 문제 중 '환경/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국민 대다수(89.5%)가 인식, 미래환경의 보전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음(국정홍보처, '06)

- 국민은 향후 10년 뒤 환경보전이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인식(PCSD, '07)

<지속가능발전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5년 후에 한국사회가 직면할 문제 인식 국정홍보처 '06) 현재와 10년후 국가정책의 비중 PCSD,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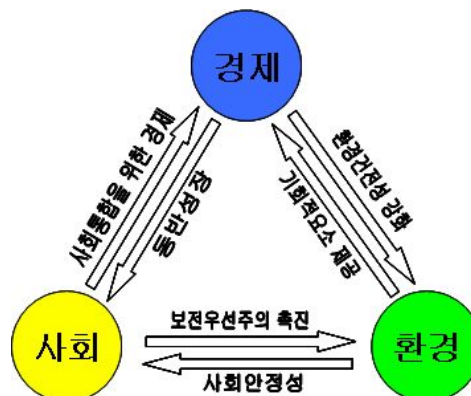
□ 경제와 사회정책의 동반성장과 환경친화성 개념의 융합

○ 동반성장의 기반위에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정책 연계

- 동반성장을 위한 기회부여, 비용감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지닌 정책으로서의 미래환경 패러다임이 필수적

- 경제·사회부문의 동반성장 전략에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적 환경정책을 융합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을 보완, 발전이 가능

-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은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강화하는 국가정책비전으로 국가비전 완성도를 보완·발전



동반성장의 경제·사회정책 + 지속성 중심의 환경정책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고려한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성과와 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접목, 통합
 -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가 동반성장의 기회적·경쟁력 강화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5대 부문 전략과 연계 강화
- 동반성장을 위한 기회부여, 비용감소 및 잠재력을 지닌 정책으로서의 환경친화적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실천
 - ⇒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가정책 패러다임의 설정

III-2. 국가비전의 지향점

□ 제3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비전

○ 산업화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경제-사회통합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

- 18세기 후반 기계혁명에서 20세기 후반의 IT혁명시대로, 현 21세기에는 ET혁명 시기로 이행하는 하고 있으며 이는 현 시대가 자원-환경 위기 시대임을 반영

○ 자원-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이행을 위한 비전 - "지속가능성장"**

-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요소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다가오는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는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의 경쟁력임을 인식**

· 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의 재구성에 초점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는 환경정책은 규제가 아니며 **환경오염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확한 판단기조를 유지**

-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한 환경규제 및 정책이 필수적**이며 **동반 성장과 지속환경의 개념이 함께하는 국가 비전**이 중요

· 자원에너지가격이 급등하고 국제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코효율성(Eco Efficiency)**이 시장경쟁력을 좌우

※ 선진국의 경우 선도적 환경규제(EURO V 자동차규제, REACH 환경물질 위해성관리 등)를 통해 자국 기업의 에코효율성 혁신을 유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일조

○ **경제·사회·환경부문 간 균형발전을 통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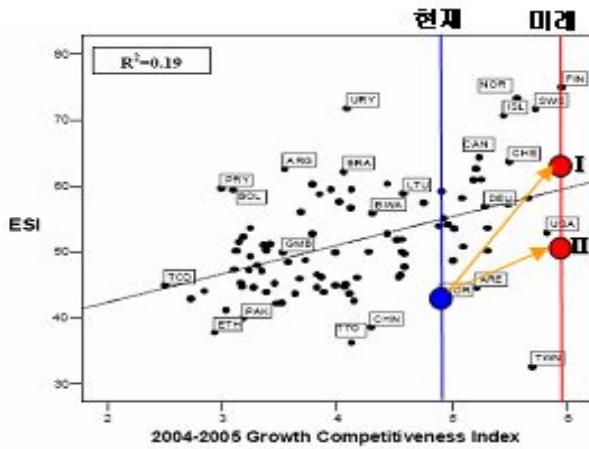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삶의 질을 보여주는 환경지수(ESI와 EPI)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21세기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ESI와 EPI의 향상이 함께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경제·사회 부문의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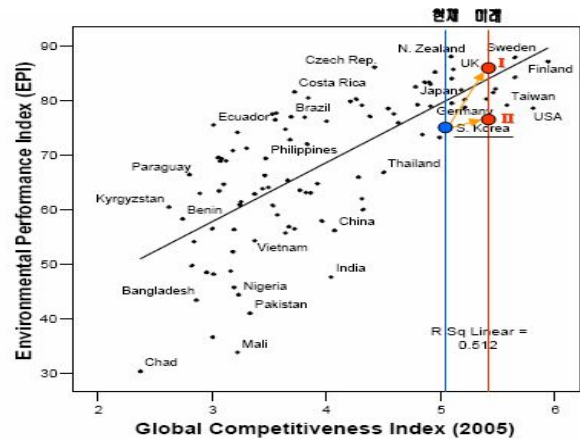
- 향후 사회시스템의 혁신과 기술축진·투자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 및 삶의 질의 동시개선을 도모하여 "비전 I"로 이행**토록 추진

· 비전II에서 비전I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투자는 사회시스템 혁신과 기술축진

등을 우선 추진하여 최소화



<ESI>



<EPI>

- ※ 비전 I : 국가의 성장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달성
- 비전 II : 국가의 성장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 달성

현재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비효율적 대응	⇒	효율적 국가기후변화체계 구축과 운영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수동적 대처	⇒	온실가스감축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민간부문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낮은 관심	⇒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총력 대응 구축
환경규제는 비용유발, 제재수단	⇒	글로벌 규제에 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및 체질 강화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부처별 개별적 대응	⇒	One-stop 서비스의 범정부차원의 통합상구 운영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	⇒	친환경상품에 대한 선진화 된 국민 인식
양적팽창 중심, 고비용 소비의 국토개발	⇒	고효율 국토개발 및 가치보전/창출
국토이용 및 보전을 둘러싼 갈등 유발	⇒	사전예방중심의 SEA 및 사회적 담론체계 내재화
식량 및 농지, 해양자원의 감소	⇒	농지 총량관리 및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미흡한 에너지원별 미래대책 및 저효율성	⇒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부처간 의견교환 및 조정능력의 후진성	⇒	이행계획의 실천으로 부처간 유기적 협조
사후 관리적 갈등조정 및 대처	⇒	담론을 통한 사전예방적 지속가능발전 체계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시행을 통한 환경·경제·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체계 구현

- 2030년에 높은 수준의 삶의 질에 기초한 선도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 체계적 대응의 효율을 극대화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 근거한 이행계획의 실천과 검증을 통한 국가비전의 효율적 운영
 - 참여와 대화 그리고 협의와 조정의 거버넌스 체제의 내재화



- 2030년을 준비하는 국가정책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여러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굴**
 - ⇒ 동반성장과 지속환경을 연계한 “지속가능성장의 틀” 구축을 통한 국가발전 구현

IV 국가비전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 2030년을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의 비전

○ 미래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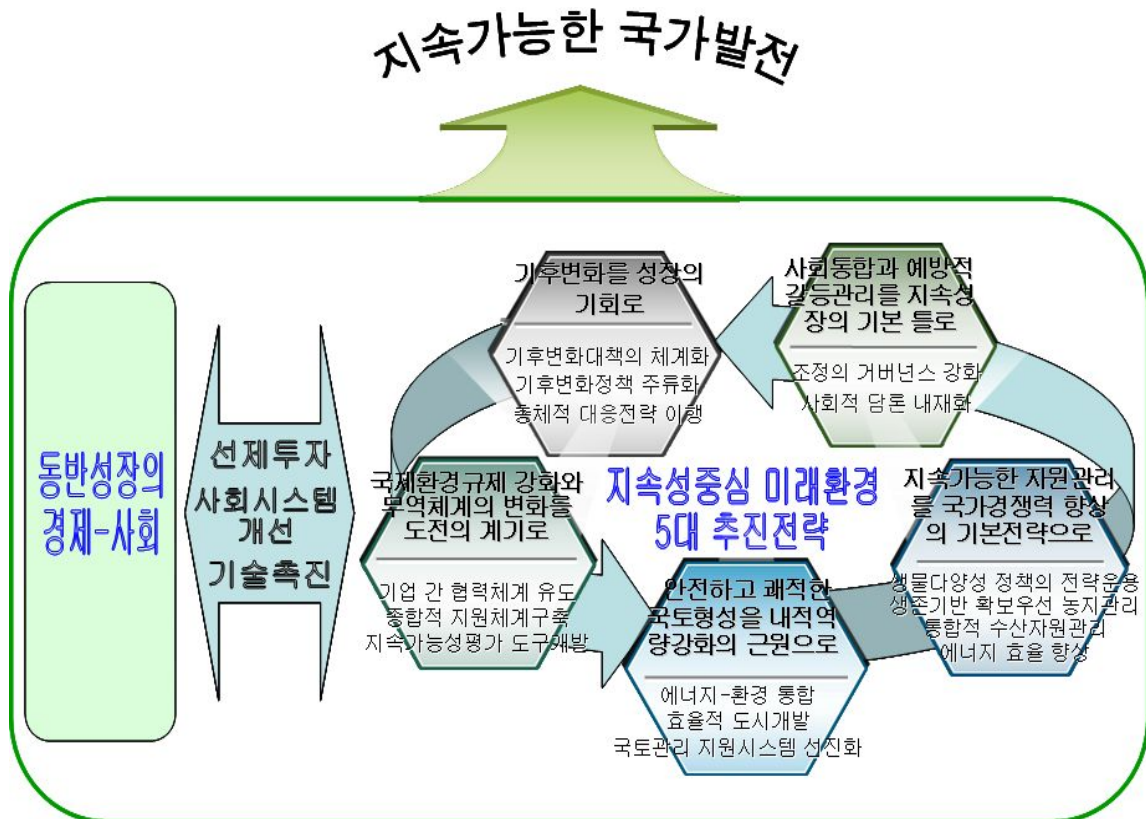
-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환경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5대 부문 미래전략 및 추진방향 도출

5대 추진전략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무역체계의 변화를 도전의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형성을 내적역량강화의 근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전략으로
사회통합과 예방적 갈등관리를 지속성장의 기본 틀로

- “미래환경”의 개념은 기회적 요소로서의 환경, 지속성장의 잠재성을 보장하는 환경관이며 이는 “동반성장”에 있어 비용감소와 기회창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미래전략 1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1) 직면현황

□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피해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기인한 기후변화는 폭염, 홍수, 가뭄, 해수면상승, 생태계 변화, 고온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 초래
 -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피해규모는 1950년대 450억 달러에서 1990년대 7,040억 달러로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이해관계 다변화 및 국가 경제적 영향 증대

□ 기후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 한반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농도 증가는 2000년 372ppm, 2005년 389ppm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평균기온은 20세기에 1.5℃ 증가하여 지구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199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30일 짧아졌고, 여름과 봄은 20일 증가
-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의 경우 해수면이 연평균 0.5cm씩 상승하고 있고, 동해의 경우 최근 9년 동안 0.65cm 상승해 최근 전 세계 평균치인 0.31cm를 크게 상회
 - 한반도 평균기온은 21세기말 6℃ 증가하고 해수면은 34~4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 깨끗한 성장과 고용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기대
 -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04년 430억 유로에서 2030년 4600억 유로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성장시장이며, 에너지효율개선 시장도 매년 5.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의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발전
 - UNEP에 따르면 2006년 22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온실가스 거래시장 규모는 2012년에 2조 달러에 이를 전망(UNEP Finance Initiative 자료)

2) 기존 대응의 문제점

□ 협상전략적 관점에서 감축정책의 소극적 추진

-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없으며, 미국이 불참하는 상황, 선진국의 추가적 감축노력이 보다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나라는 의무국으로의 편입 지연을 강조
 - 2013년부터 의무국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의 의무감축량이 부여될 경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감축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은 국내여건을 사전에 누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상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단편적 사고

-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감축시나리오에 따라 2015년 국내총생산(859조원)의 0.4~5.1%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손실에 집착,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프로그램의 다각적인 운용을 통한 기후변화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윤 획득 효과를 간과

□ 취약한 대책기반

- 과학적 근거 자료 체계적인 확보와 이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운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실천세부 계획 부재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량적 감축목표의 설정 난항
 - 지구온난화의 분야별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적응정책 수립에 걸림돌
- 정부주도 대책정책으로서 국가적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 편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여건은 미흡, 기존 기후변화 대응이 중앙 부처와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

3) 미래전략

□ 온실가스 감축산업을 IT산업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주어진 잠재감축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
 - 온실가스 주요배출원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하여 각 분야별 자발적 대응전략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감축기술의 개발을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산업의 전략적 육성
 -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우리나라 기술역량에 부합하고 시장전망이 높은 기술분야를 선정, 집중 육성
-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신시장 창출
 - 탄소세 부과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및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적으로 사용
-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보급 확대로 초기시장 창출 및 기술개발 유도
 - 에너지·환경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효율개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억제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mainstreaming)하여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및 정책결정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기후변화정책을 정책 주류화
 - 기후변화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계획,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부문별로 단계적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시행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부문간, 부문내 적응전략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적응평가 시스템 구축
 - 적응평가 시스템에 기반하여 적응정책대안별로 효과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 주요 배출원별로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잠재량 산정
 -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완료 및 감축비용까지 고려한 경제적 감축잠재량 파악
-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평가모형 구축
 - 한반도 기후분석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리/수문, 수생태계, 산림/농업, 건강, 산업, 서비스업, 교통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취약성을 평가

○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제 통합 모형 구축

-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향후 기술 및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및 시장선점 편익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감축비용 예측모형 개발
-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감축비용 예측 모형과 결합한 환경·경제 통합 모형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총력 대응

-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기후변화혁신모델(지자체, 기업 등)을 선정하여 재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이의 확산을 유도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촉진
 - 관련 부처 공동 온/오프라인의 정보제공(기후정보센터 운영) 및 체계적 홍보, 자발적 실천을 위한 실행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
- 시민사회단체의 대응활동 촉진 및 프로그램 공동 진행
 -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의 교육, 캠페인, 에너지운동 등 자발적 활동의 간접 지원

미래전략 2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무역체계의 변화를 도전의 계기로」

1) 직면현황

□ 국제환경규제 및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

- 21세기 들어 국제환경협약과 주요국들의 환경규제가 더욱 급속히 확대 또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우리 경제 및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이는 국제환경규제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
- WTO(다자주의)와 FTA(지역 또는 양자주의)를 양축으로 하는 국제경제의 세계화는 빈곤퇴치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개도국 경제권의 반발과 서구 시민사회의 내부저항에 봉착해 있고 개도국 거대경제권(CHINDIA)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

으로 등장하는 등 신·구대륙, 선·후진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WTO 다자무역체제와 함께 현대 세계경제의 주류로 확산되고 있으며, '05년 기준 세계 총무역량의 55%에 이른 것으로 추정

□ 국제환경규제 강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대기, 생태계, 해양, 육상 및 해양 생태계, 유해폐기물 및 화학물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은 앞으로 더욱 확대 및 강화 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국제환경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이외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및 처리를 규제하는 바젤협약, 유해화학물질의 무역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매우 다양

□ 경쟁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

- EU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지역으로 수출불가
- 이러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는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되는 추세
- 이들 법안의 제정은 환경요인이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기준 및 관련표준을 우리의 주요 교역상 대국들이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
- '06년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40여 곳은 미국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를 요청하여 새로운 시장질서 창출 도모

2) 문제점

□ 환경규제 대응력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확대

- 환경경영이 가능한 대기업은 강력한 정보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교역상대국의 각종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보유
 - 국제환경규제에 비교적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대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환경규제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이질적 요소 존재

○ 국내 기업보호를 위한 이중적 기준구조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국내외 기준 일원화 및 환경규제 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미흡

□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 환경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의 비활성화

-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대책을 전달하는 시스템 취약

○ 환경규제에 따른 원가상승과 요구사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신속한 대책수립 능력 부족

- 환경규제에 따라 유해물질 대체비용, 폐제품 처리, 적합성 평가 등 원가상승요인 발생 등 주요 이슈의 분석능력 미흡

3) 미래전략

□ 대응전략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본 조건의 구현

○ 기업들의 협력체계와 대기업의 인식 제고

- 효율적·효과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망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력체계 제고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대기업의 헌신적 지원이 대기업의 자발적 인식(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공급망의 성과향상이 필수적이라는)이 필요
-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
- 규제물질에 대한 분석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실험기관의 역량강화

□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차원의 one-stop service 창구 구축: 환경규제 관련 정보제공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정보통합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산업)중심의 환경규제 대응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져 있는 대응프로그램을 업종별로 종합 재정리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환경규제 관련 물질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관리대

상이 되고 있는 규제물질을 가치시스템 상에 있는 기업들의 공급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동 물질에 대한 관리를 규제요구사항에 맞추어 실시

- **친환경경영상 운영:**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

□ 국제무역체제 변화에 대한 대응강화

- 국내 **환경규제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기술 지원, 필요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도하는 방안 추진
- 세계경제 통합 과정에서 초국적 기관의 강화, 다국적 기업의 등장, 주변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한 **국민 주권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강화**
 -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 등과 같은 객관적 결정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 활용
- 기술축진과 혁신을 지향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단계적 적용 강화**를 통해 기업 **수용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
 - 양적 규제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의 내용과 영향을 관리하는 질적 규제관리방식으로 전환

미래전략 3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형성을 내적역량강화의 근원으로』

1) 직면현황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과 질적 향상 요구 증대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따른 삶의 질 요구 증대**
 -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1인당 GNI는 1997년에 비해 2006년 현재 약 2배 가량의 성장세를 보임
 -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가 경제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생활 각 분야에 걸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킴

관리에 치중하여 계획을 위한 **사전에방체계의 마련은 미흡**

2) 문제점

□ 국토이용 및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예방 미흡

○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 지연

- 국토이용에 따른 갈등을 사전예방토록 보전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후진성
- 중요한 생물의 서식처, 높은 질을 갖는 경관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자산에 대한 보상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국토자원 이용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제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철저한 보전을 저해**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의 통합성 취약

○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가 취약하여 양자가 **별개의 계획으로 기능하여 비효율성과 갈등을 초래**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었으며**, 국토계획에 자연환경조사/생태자연도 등의 조사자료 반영 미흡
- 지속가능발전전략·계획의 경우에도 국토이용과 환경관리 등 2개 부문 계획체제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

○ 국토이용, 도시개발,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및 추진방안 도입 미흡**

-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의 실천적 방안 필요

3) 미래 전략

□ 체계화된 보호지역 관리체계 및 지원시스템의 선진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체계 정비

- IUCN 등 국제기구에서 수준의 보호구역 지정을 고려한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기준, 보전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
- 자연유산관리의 선진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관리계획을 연계·통합하는 관리체계를 수립,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유발 최소화**

○ 자연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보전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의 토지매수를 위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트러스트(trust)운동을 활성화**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시 자연생태 여건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개발기회의 상실을 적극 보상하기 위하여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국토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의 수요관리체계 확립

- 수요가 없는 지역에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이 집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을 수요관리 계획으로 전환**

○ 농촌르네상스 전략의 수립 및 구현

-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농촌지역의 도시민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수립을 통한 농촌지역의 이용 다양화 추진
- 그린투어리즘, 생태관광 자원화 및 바이오산업 육성의 근거지로서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
- 도시 근교지역에 실버산업화를 유도하여 지역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유도하여 유기적 지역발전을 유도

○ 자연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리모델링

- 도시공간 내 자연공간 창출·복원을 지속적으로 유인·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유형(Best Mode) 발굴 및 체계적 지원
- 인구성장을 기초한 압축도시 개발방식(Compact city)과 함께 인구저성장형 지방도시를 위한 압축도시 계획기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₂ 관리 등)의 통합성 강화

○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도록 의무화**,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 도시재정비 및 개발 시 **CO₂-zero-emission**을 목표로 하는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CO₂ 무배출 모델을 구축

○ CO₂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교통정책 수립

- 교통시설 공급시에 최종 목표를 CO₂ 무배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수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CO₂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건설 시 녹지 조성,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을 확대, 자전거도로 이용을 확대 등과 병행하여 추진

미래전략 4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전략으로』

1) 직면현황

□ 생물다양성 정책의 전략적 운용이 우선 고려되는 선진정책

- 선진국은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의 건강, 복지, 식량, 환경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근본정책으로 인식
 -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은 무궁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가진 천연자원
 -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0만종 이상의 생물자원 중에서 1% 이하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현대의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은 투자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향후 10년까지 2조 5천억 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석유산업은 5천억 불로 5배 높은 규모) (Kate & Laird, 2003)

□ 냉전시대에서 “유전자전쟁” 시대로 - 생물자원의 보유주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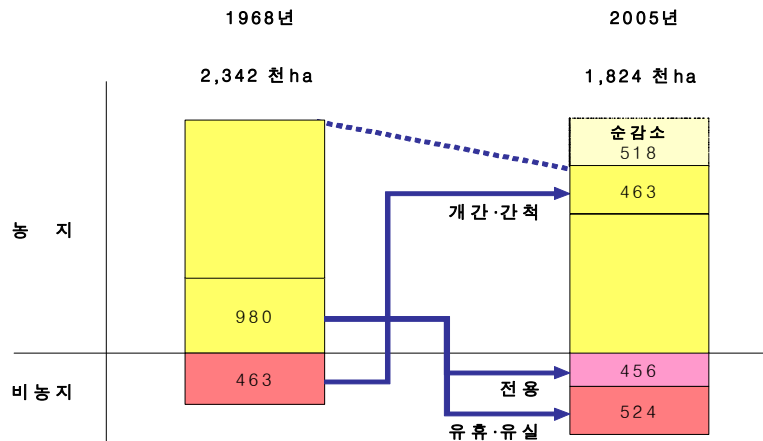
-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빈약한 국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의견 대립 심화
 -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자원 보전원칙과 선진국이 중심이 된 WTO /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일부 내용이 상치되며, 생물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이 확산
 - 최근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의 자원보호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은 생물자원의 보유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

□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

○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와 관리 부족

- 농업종사자 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등에 따른 농업 채산성 악화, 투기적 농지소유 증대에 따른 농지의 유희·유실에 기인한 감소심화 상태 직면
- “유희·유실 등”에 의한 농지감소면적이 농지전용에 의한 감소면적을 능가, 최근

37년 간(1968~2005) 농지는 22% 순감소



< 1968년 이후 전용 및 유휴/유실 등에 의한 농지감소 >

○ 식량수급의 불안전성 확대

- 세계 곡물수요 증가와 가격 폭등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증가와 미국의 곡물수출 감소로 인한 국제적 식량수급 불안정
- 한국의 곡물자급률 감소와 품목 간 수급불균형 문제의 대두
 - '05년도 자급률: 식용 곡물류 → 53.4%, 식용+사료용 곡물류 → 29.3%

○ 어업생산량 감소

- 전체 어업생산은 1986년 370만톤의 정점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70만톤('05)을 기록
- 수산자원량의 대리지표인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전반적으로 정체·감소추세인 반면 실질 어획강도(어획노력량)는 지속적인 증가추세

□ 낮은 에너지 자립도와 불균형적 공급-효율 정책

○ 높은 소비, 과중한 수입의존도

- 에너지소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02년) 수준, '90~'02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6.8%(선진국은 1.4% 내외), 에너지 수입의존도 97.3%
-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패턴을 향하고 있어 강력한 수요관리 부재 시 세계최고 소비수준에 이를 전망

○ 공급중심 정책으로 인한 효율향상 측면 관리소홀

- 공급중심의 정책에 따른 부하관리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에너지 소비 감소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되지 않고, 효율향상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
- 단위기기의 효율은 높으나 OECD 국가들보다 시스템효율이 낮아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황에 직면

2) 문제점

□ 미흡한 생물자원관리체계 및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우리나라는 경쟁대상인 국가들에 비해 생물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미흡하며 국가적 통합대응체계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효율성 저하
-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과 「야생동·식물보호법」, 농림부의 「종자산업법」 등에 의해 생물자원이 보전·관리되고 있으나, **생물자원의 국부적 가치나 국가전략자원으로서의 인식은 미약**
 - 우리나라의 생물종의 수는 10만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체 생물종의 30% 정도인 29,916종(국내고유종, 2,446종)만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0종 이상이 멸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체계적인 연구조사, 보전, 확보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생물자원의 파악 및 보유, 관리**는 선진 외국에 비할 때 **열악한 수준**
- **미시적 분자생물학 중심의 "BK21"사업 추진으로 인한 거시적 생물다양성분야 연구의 급속한 퇴조**
 - 불균형적인 연구추진 및 장려정책으로 인한 생태학, 분류학 및 진화학 등 순수 생물학 분야를 연구하는 기반의 붕괴로 **고급인력 양성의 근간 상실**
 - 대부분 대학의 생명과학 관련 학과는 BK21 연구비 수혜가 용이한 미시적, 분자 공학적 분야의 교수진만을 확충함으로써 **학문적 편식현상이 심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

□ 비효율적 농수산 자원관리체계

- **국토 확충계획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원서식지 환경 악화**
 - 육상 오수 및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간척지가 감소되어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해양환경이 갈수록 악화**
- **미흡한 수산자원 회복·관리노력**
 - 해역별·어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체계

한계와 통합적 자원관리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미약

□ 에너지원에 대한 미래대책 미흡

○ 에너지원간 통합 수요관리 계획 부재 및 효율향상에 대한 에너지공급자의 소극적 대처

- 에너지원별 기능조정을 통한 수요절감 정책이 매우 취약하며, 공급 중심의 부하관리로 인한 효율향상 정책 부진
- 부하관리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에너지 소비감소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되지 않고, 효율향상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
 - ※ 최근 3년간 투자: 부하관리에 1,559억원(78%), 효율향상에 340억원(22%)
 - ※ 효율향상을 위한 우리의 저조한 투자실적 ⇒ 미국('99) : 부하관리 35%(430백만\$), 효율향상 65%(820백만\$)

○ 규제와 유인을 통한 시장전환과 투자효과 분석 미흡

- 규제와 유인정책의 효과분석과 세부사업별 수요관리, 부하저감, 효율향상 등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와 분석이 미흡
- 통합적 관리를 위한 미래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부진

3) 미래전략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운용

○ 국가전략자원으로서의 장기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기존 및 향후 조사될 생물종의 정보관리 제고 등 국내 생물다양성 조사사업의 확대·활성화 및 국가정보기반체계 정비
- 국내 고유 생물자원의 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출된 국내 고유생물종의 정보관리 강화

○ 국내 생물종 보전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의 지속적인 확보

- 국립생물자원관의 중심으로 보전시설(*In-situ*와 *Ex-situ* 보전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한 첨단기술의 확보 및 보급

○ 생물다양성 학문분야의 연구기반 활성화

- 국내 대학의 생명과학, 환경과학 관련 학과 내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교수진 확보 및 연구에 대한 지원**
 - 생태학, 생물지리학, 진화학, 환경영향평가학 및 지속가능환경학 등의 **거시적 학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
- 생물다양성협약, WTO 등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생존기반 확보 우선의 농지 관리정책

-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 매립사업을 지양하는 동시에 국가 생존기반 최소농지확보
 - 농업진흥지역제도(농진제도)의 운용을 강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선,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생존기반으로서의 최소농지를 확보하는 방안 추진
 - 일정량의 농진지역을 확보하는 '농진총량제' 도입 및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 농지이용의 단지화(계획적 이용화)를 도모하는 '농지이용조정' 개념의 도입을 검토
- 국가와 지자체간의 토지이용조정 관점에서 지자체 단계의 '토지이용조례' 등을 활용한 '계획적 토지이용' 방안 구축
 - 농지 유희화·불법 소유 및 이용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유희농지의 활용 및 보전책을 강구
- 전업농의 규모 확대와 농지의 단지화 병행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지연적 조직경영'(마을단위 영농조합)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추진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 환경관리시스템의 추진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 수산자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연안역 생태계 보전·관리의 체계화 및 통합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내셔널트러스트 등)를 포함하는 이행계획 마련
 -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영향과 새로운 자원관리 방안 모색
- 자원감소율이 큰 어업 순으로 목표 어종에 대한 선택적 어획이 가능한 어구, 어망 등의 자원관리형 신어업기술 개발 등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시스템 구축
 -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어업인 주도로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추진
 - 자원평가, 어업생산, 자원조성사업, 어업별 규제 등 수산자원관리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 에너지원별 수요관리의 탄력적 운용

- 원별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통합시행하고 수요관리 정책우선순위를 제고하는 등 **에너지원별 산업관리 기능과 수요관리 기능을 분리 추진**
- 가격제도를 수요관리 메카니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율을 탄력적 조정·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통한 효율향상

- 적정 원전비중 유지 및 추가 수요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석탄과 유류 등의 천연가스로의 전환 추진 등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집약도 유지 / 개선**
- 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달성 시 잉여분 적립 및 판매 등이 가능한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 검토

○ 고효율 시장전환 및 규제/유인제도의 병행

- 기기사용 개선,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저 에너지형 상품으로의 전환, 재활용률 향상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
- 에너지절약시책 성과측정 및 온실가스저감 효과 등의 분석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지표**' 개발
- 에너지기기 효율을 전주기 관리(Life Cycle Management)하며 수요관리사업을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여 에너지 총량제, 건물등급제도 등 효율규제 강화와 가스사용기기 확대 추진 등 보조 지원제도 확대를 병행 추진

미래전략 5 『사회통합과 사전예방적 갈등관리를 지속성장의 기본 틀로』

1) 직면현황

□ 공공갈등의 심화

-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가치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이 빈발, 특히 공익적 가치를 표방한 정책적 사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오늘날 **환경갈등** 문제는 갈등 주체가 다원화 되고 갈등 내용 또한 복잡·다양화 되어 **'고질적인 갈등'의 양상**

○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부담, 환경가치의 향유 정도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 및 '환경 부정의' 문제가 갈등을 더욱 확대·심화**

□ 정부 내 부처 간 이견 대립

○ 중복되는 업무 및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발생, 민간으로 전이되고 갈등이 확대되는 현상 증가**

- 타 부처에 대한 상대적 우위확보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 수준을 넘어 각 부처의 **존립 기반 강화를 위한 대립적 안목 상존**

2) 문제점

□ 사회갈등에 대한 예방능력 미흡

○ 갈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개발체제가 남겨놓은 낡은 유산(가치와 제도)들을 치유·해소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 소홀**

- 과거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불균형 성장전략이 결과적으로 지역, 부문, 계층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심화, 민주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강력한 개발욕구를 분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발 및 보존을 둘러싸고 민-관, 민-민 사이의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으나 **시민 사회 진영은 급속한 성장과 높아진 정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사회적 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 시민사회 진영이 갈등의 당사자로 적극 참여해 온 결과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급속히 상실

□ 사후 관리적 사회갈등조정

○ 갈등해결의 방안으로 **다양한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 시민(주민)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들이 도입·적용되고 있으나 보완 노력 필요**

○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탈권위주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문제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적인 역량강화 요구 증대**

□ 부처 간 의견조정 능력 후진성

- 성장과 보전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주무 부처간 업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의 부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부재
 - 부처 간 이견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민간 사회단체의 이슈로 활용되거나 이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되는 **역민원성 현상 유발**

3) 미래전략

□ 방향잡기와 조정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강화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5년 단위) 및 성과점검(2년 단위)을 통한 행정 혁신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강화**
 - 각 부처의 지속가능성 반영이 필요한 정책(건설환경, 국토환경, 도시 환경, 수 자원, 도로환경, 산업환경, 친환경농업, 해양환경 등)의 **제도적 통합·조정 필요**
 -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자연자원 및 환경오염관리, 생태계 복원 등)과 경제정책(경제기획 및 산업개발 등), 그리고 사회정책(보건, 복지 등)을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균형 있게 조율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제도설계**
 - 이를 위해 부처별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등을 통해 기능적 조정 및 연계를 확대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제도적인 통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고려
-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지방행정혁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실천 역량을 향상시키고,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강화**
 - 지방 자율적인 정책 추진의 권한 확대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조화로운 추진
- **국가발전 방향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실천 역량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실천 역량의 강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구체화하는 **환경과 복지, 보건, 기업경영 등 통합적 정책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담론이 내재화 된 지속가능발전체제

- 경제발전과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으로서 경제적 합(Economic Synthesis), 사회적 합(Managed Scarcity Synthesis; 희소성관리의 합) 그리고 생태적 합(Ecological Synthesis)의 3가지 측면을 고려
 - 경제적 합에서 사회적 합으로, 궁극적으로는 생태적 합으로의 이행을 가져올 있는 내적 모멘트를 지닌 사회적 담론 체계 토대 마련
 - 시민(환경)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자 중심에서 있음을 고려, 이에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 시민단체들은 '제5의 정부'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 없는 시민운동론" 및 "시민권력의 과잉론"등으로 환경갈등의 당사자로 전락한 과오에 대해 비판은 현 시대의 대표적 담론으로 등장
 - 이러한 비판적 담론을 시발점으로 "조정 및 분석의 틀"로서 국가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 장려하는 전략 추진
 -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담론이 점화된 이후 자생력을 유지하면서 단속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담론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 제시
 - 담론의 성격상 그 주체를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담론의 틀을 유지하는 책임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식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공동으로 분담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실천 및 담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체제 구축
 - 경제적 관점에 치중한 발전과 지속성을 고려한 발전에 있어 유발되는 환경갈등을 사후적 해결 또는 봉합이 아닌 사전예방주의(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담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체제의 정착 및 운영강화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회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체의 능력, 즉 거버넌스에 관한 꾸준한 담론을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
 -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마련하고 담론의 장을 제공,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통합 구현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07.7)이 제정됨으로써 ①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수립하고(매20년), ② 이행계획을 작성하고(매5년), ③ 추진상황을 점검(매2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V-1. 새로운 국가비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의 유연화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논의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정부 내 시스템 효율성 고도화 필요**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매 20년), 이에 따른 이행계획의 작성(매 5년) 및 추진상황 점검(매 2년)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구성
 - 중복, 다원화되어 있는 정부의 집행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유사 업무기능의 발전적 통폐합을 시행
-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국가적으로 관리 조율하고 방향타 역할을 위한 정부조직을 구상
 - 환경부, 건설교통부(건설 부문), 해양수산부(해양환경 부문), 보건사회부(사회복지 부문), 산업자원부(에너지환경 부문)의 기능 및 주요업무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중복부문을 통폐합, 유연한 정부조직으로 재편**

정부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국토환경자원부”(가칭)를 구상하고 폭넓은 담론을 통한 사전 예방적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주관토록 하여 21세기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동력을 내재화

- 유럽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처 운용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이를 한국여건에 맞게 적용
 - 영국은 녹색각료제도 및 환경·식품·농촌부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
 - **녹색각료(Green minister) 제도** :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 녹색각료를 두어 각 부서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정부의 각 부서들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정책 수정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환경비용과 편익을 반드시 고려
 -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환경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식품 및 농촌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총괄

- 스웨덴은 중앙정부에 “지속가능발전부”를 두고 운영
 -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고려·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조직을 자문기구로 두지 않고 정부부처로 통합함
- 프랑스는 “지속가능발전생태부”를 각각 두어 하나의 행정부처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 수립하고 주관
- 독일정부는 Green cabinet(각료회의)를 두고 있음. 부처별 독립성을 유지하나 총리의 리더십으로 부처 간 정책조율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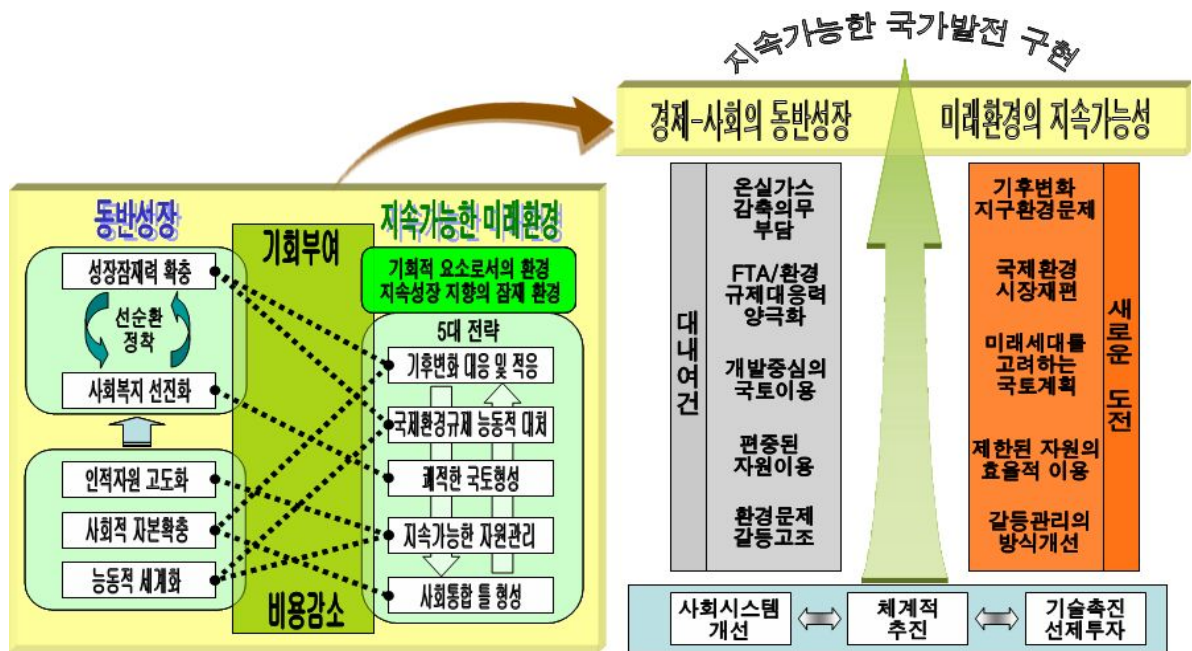
V-2. 향후 추진 및 보완·발전 시켜야할 부문

□ 국정원리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의 재정립

-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이 정부의 핵심국정원리 채택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여 국가비전 지향점 및 5대 미래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개방-집중된 논의 실시
 - 현재까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과 및 실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백서의 발간을 정기화
 -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반사항에 대한 수행체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점검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한 국제적 역할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기조 형성

□ 기존의 국가지속가능 비전과 사회-경제 2030비전의 융합·발전

-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2030”의 5대전략 수정 및 보완
 -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추진을 위한 5대 미래전략과 동반성장 5대전략 간의 중점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전략 보완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성장잠재력 확충” 부문 및 “사회적 자본확충” 부문
 - 국제환경규제 능동적 대처 → “성장잠재력 확충” 부문 및 “능동적 세계화” 부문
 - 쾌적한 국토형성 → “사회복지 선진화” 부문
 -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인적자원의 고도화” 부문 및 “능동적 세계화” 부문
 - 사회통합의 틀 형성 → “사회적 자본확충” 부문



<환경과 지속발전을 고려한 5대전략과 동반성장의 연계성 및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비전의 구현>

○ 5대 전략 수정에 따른 비전 2030의 핵심과제 내용 재편성 ⇒ “50 + α”

-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추진 5대 미래전략은 15개 추진항목, 42개 세부사항을 추진 과제로 선정

	미래전략 1	미래전략 2	미래전략 3	미래전략 4	미래전략 5
세부 추진과제 수 (42)	10	8	7	11	6

-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추진 5대 미래전략에서 언급된 세부사항을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 반영하여 수정,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완성**
- 동반성장의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부문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에 본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부문 미래전략인 “지구온난화 예측 및 중장기 적응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책의 체계화”와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내용을 반영

※ 도식 “지속가능한 국가비전(50+10)” 참조

- 기존의 핵심과제에 포함하여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 시행이 필요한 항목 10개 세부과제는 신설하여 추진

<추가적인 핵심과제로 신설되어 전개되어야 할 7개 추진항목 10개 과제>

미래전략	추진항목	세부항목
1.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기후변화 대책의 체계화	지구온난화 중장기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국정과제화 적응전략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적응평가 시스템 구축
2.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무역체계의 변화를 도전의 계기로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환경규제 관련 물질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의 구축
		친환경경영상 운영
3.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형성을 내적역량강화의 근원으로	체계화된 국토관리계획 및 지원시스템의 선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체계 정비
4.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본전략으로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어장정화사업, 환경관리시스템의 추진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시스템 구축
5. 사회통합과 사전예방적 갈등관리를 지속성장의 기본 틀로	방향잡기와 조정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강화	정책적 우선순위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
	사회적 담론이 내재화된 지속가능발전체제	이행계획 실천 및 담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체제 구축

□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내용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비전의 설정에 요구되어지는 전환점(Turnign point)를 보다 구체화**하여 필요성과 시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
 -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적 문제를 몇 가지로 핵심화하고 이러한 부문에서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것을 인지해 주는 지표를 보다 선명하게 선별, 활용함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
 - 21세기에는 환경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가 문제라는 것으로 보다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한 전환점을 설정하고 현재 이 전환점을 지났음을 강조
- 추진항목이나 세부항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을 가시화하기 위해 **환경-경제, 환경-사회 부문의 연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실시
 - 환경과 경제 관련 부문 : 가격, 세금, 다양한 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의 장기적 예건을 포함하여 경제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
 - 환경과 사회정책 관련 부문 : 환경세 부과에 따라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이와 함께 복지효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 각종 계획의 범위 및 시행주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의가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작업을 실시, 비전의 세부적인 내용을 선명화

- 환경문제에 있어 그 개념과 범위를 세계적, 동북아, 국가, 지방 등으로 구분하여 언급하는 방안 검토
- 환경인력관리 및 환경교육에 있어 보다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설정이 상세히 기술 되는 것에 대한 검토

○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실시, 비전의 완성도를 제고

- 글로벌 부문이 문제가 되므로 환경외교 부문에 대한 보완이 향후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 외교적 대응의 향후 진행방안 등의 큰 구상을 추가하여 완성도를 제고

□ 향후 추진관련 제언

○ '08년도 후반기에 실시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1차 이행계획('06-'10) 1단계 평가 및 수정 시에 본 연구내용에서 제시한 5대 미래전략, 15개 부문, 42개 세부사항을 적극반영

○ 차기정부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국정원리로 채택하도록 하여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20년 단위(2011-2030)의 국가비전으로 제시

- '08년도에 새롭게 구성되는 PCSD 5기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발전 시켜야 할 부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진(환경, 사회, 경제부문)을 구성, 2010년까지 내용을 완성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2차 이행계획('11-'15)에 지속가능한국가발전 비전을 반영하여 부처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 제공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50 + 10)

구분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	지속가능한 미래환경(42)	추진항목(15)	미래전략
성장동력 확충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R & 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에너지 확보 및 효율화 대책 시행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중장기 적응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개선산업을 미래수출산업화 • 에너지절약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정책추진 •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국정과제화 • 적응전략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적응평가 시스템 구축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 온실가스감축산업을 IT산업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 •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총력 대응 • 기업들의 협력체계와 대기업의 인식 제고 • 중소기업환경능력 강화 및 컨설팅 제공 • 범정부차원의 one-stop service 창구 구축 • 환경규제 관련 물질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의 구축 •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확산 • 국내환경기준 수준 국제화 • 국제환경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저감대책 강화 • 환경규제 단계적 적용 강화를 통한 기업 수용력 및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체계 정비 • 자연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국토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의 수요관리체계 확립 • 농촌 르네상스 전략의 수립 및 구현 • 자연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 리모델링 •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 CO2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교통정책 수립 • 장기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가전략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 국내 생물종 보전을 위한 시설 및 기술 확보 • 생물다양성 학문분야의 연구기반 활성화 • 국가 생존기반 최소농지확보 • 국가와 지자체 간 토지이용조정 체계 구축 • '자연적 조직경영'(마을단위 영농조합) 전환 • 해양환경 청정관리시스템의 추진 •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시스템 구축 • 에너지원별 수요관리의 탄력적 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연료전환, 효율향상 • 고효율 시장전환 및 규제/유인제도의 병행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통한 행정 혁신, 제도적인 기반 구축 • 분권과 자율의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 정책적 우선순위의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 • 생태적 함으로의 이행을 위한 내적 모멘트 마련 • "조정 및 분석의 틀"로서 사회적 담론 활성화 • 이행계획 실천 및 담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체제 구축 	기후변화 대책의 체계화	1.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가제도 혁신 - 국립대 통폐합·특수법인화 -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 학제 개편 -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 대학별 특성화 및 산학연 연계 강화 -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확대 -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mainstreaming) • 대응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무역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체계화된 국토관리시스템의 전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2)의 통합성 강화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 생존기반 확보 정책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직역연금 개혁 - 건강보험 개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의료급여제도 개편 - 비정규직 대책 -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영세자영업자 대책 - 방과후 활동 확대 - 보육 서비스 확대 - 식품안전 보장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주거복지 확충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쾌적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 농어촌 활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mainstreaming) • 대응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무역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체계화된 국토관리시스템의 전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2)의 통합성 강화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 생존기반 확보 정책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사회복지 선진화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직역연금 개혁 - 건강보험 개혁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의료급여제도 개편 - 비정규직 대책 -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영세자영업자 대책 - 방과후 활동 확대 - 보육 서비스 확대 - 식품안전 보장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주거복지 확충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쾌적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 농어촌 활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mainstreaming) • 대응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무역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체계화된 국토관리시스템의 전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2)의 통합성 강화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 생존기반 확보 정책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자본확충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사법제도 개혁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지방행정체계 개편 - 지역공동체 등 자발적 복지체제 구축 - 국방개혁 -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인력의 서비스 위주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mainstreaming) • 대응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무역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체계화된 국토관리시스템의 전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2)의 통합성 강화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 생존기반 확보 정책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능동적 세계화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 확대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외국인력정책 마련 -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구축 - ODA 규모 확대 - 통일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mainstreaming) • 대응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무역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체계화된 국토관리시스템의 전진화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기능적 설계 • 토지이용과 에너지·환경(CO2)의 통합성 강화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 생존기반 확보 정책 • 생태계 / 자원회복에 기초한 통합적 수산자원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공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기후변화 대응